

# 월간 ESG 트렌드 리포트 8월호

석유화학/재생에너지/배터리, 반도체/IT/철강/조선, 자동차, 기후테크 및 순환경제, 식음료 등 5개 주제에 대한 ESG 트렌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월간 ESG 트렌드 리포트 8월호

Monthly ESG Trend Report

## 01 석유화학/재생에너지/배터리

### 『 Key Takeways 』

- 인도 태양광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모듈 제조능력이 2014년 2.3GW에서 2024년 100GW 이상으로 확대됐지만, 미국의 고율 관세와 중국산 원자재 의존도가 큰 리스크로 꼽힌다.

- 글로벌 LNG 시장은 상반된 전망 속에 요동치고 있다. 미국은 2030년까지 수출량을 두 배 가까이 늘리며 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나, 공급 과잉과 비용 부담 우려도 커지고 있다.

- SAF 생산 확대가 지연되고 있다. 전 세계 165개 프로젝트 중 대량 생산에 성공한 것은 10건에 불과하며, SAF는 전체 항공유 사용 비중의 1%에 그치고 있다.

## □ 인도 태양광 산업, '세계 2위 도약' 향한 질주... 미국관세와 높은 중국의존도는 해결과제



인도의 태양광 산업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Shutterstock

인도가 태양광 산업에서 빠르게 성장하며 2030년대 중반까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시장으로 도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실제, 인도의 태양광 모듈 제조 능력은 2014년 2.3GW에서 2024년 100GW 이상으로 확대되며 단기간에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미국의 관세 장벽과 중국산 장비 의존도가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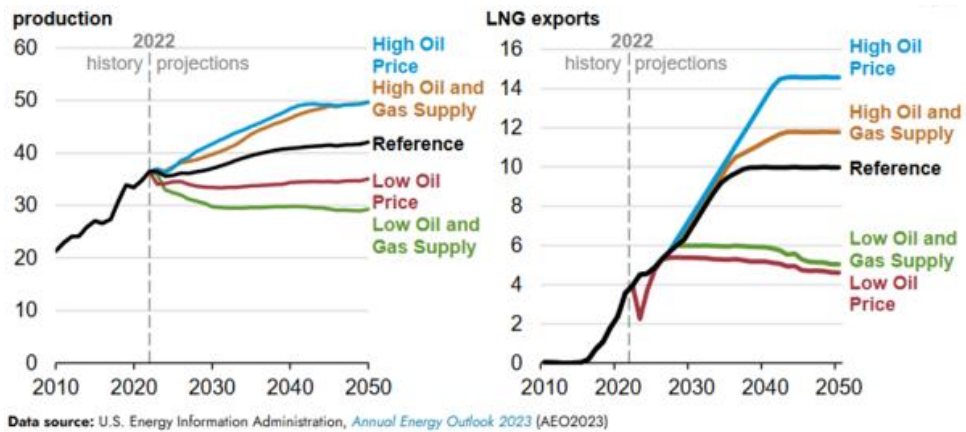
인도의 태양광 수출은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2025년 상반기 수출의 97%가 미국으로 향했지만, 미국 정부가 최대 64% 관세를 검토하면서 시장 접근성이 위협받고 있다. 여기에 반덤핑 제소까지 더해져 '우방국 공급망(friendshoring)'의 기대가 오히려 제약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한 태양광 유리, 알루미늄 프레임 등 핵심 부품의 97% 이상을 중국에서 조달할 만큼 공급망 편중이 심각하다. 중국 정부가 기술 이전을 제한하는 상황에서 인도의 독자적 제조 역량 확보는 여전히 쉽지 않다.

이에 인도 정부는 모듈과 셀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정부 승인 제조업체 목록(ALMM) 제도를 도입해 국산화와 생산 능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민간 투자도 확대돼 2024년 태양광 프로젝트에만 142억 달러가 유입됐다. 이러한 정부 지원에 힘입어 인도산 태양광 장비의 가격은 최근 1년 사이 3분의 1가량 하락했으며, 모듈 생산량은 2021년 초 대비 12배 증가한 바 있다.

[☞인도 태양광, 2030년대 세계 2위 부상 전망...대미 관세·대중 의존 넘을까](#)

## □ 미래 에너지 핵심인가, 위험한 베팅인가...엇갈리는 LNG 시장 전망



미국 에너지 정보청의 미국LNG생산 및 수출 전망 시나리오/EIA

액화천연가스(LNG) 시장을 둘러싼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미국과 주요 에너지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며 수요 확대를 모색하는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공급 과잉과 재생에너지 확산이 맞물려 성장세가 제동에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하고 있다.

미국은 LNG 수출을 중심으로 천연가스 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다. 미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미국의 LNG 수출은 2024년 하루 11.9억 입방피트에서 2030년 21.5억 입방피트로 두 배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형 수출 터미널이 잇따라 건설되고 있으며, 헤인스빌·퍼미안·마셀러스 등 주요 셰일가스 지대의 생산량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셰브론, 엑손모빌, 셀, BP 같은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도 2030년까지 LNG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겠다고 공언하며 장기 수요 성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반면,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LNG투자를 보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토탈에너지가 미국 텍사스 리오그란데 LNG 프로젝트의 추가 투자를 보류한 것은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는 대표적 사례다. 미국의 철강 관세 인상으로 건설비용이 약 10% 상승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됐고, 공급 과잉 우려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실제, 블룸버그NEF는 2027년부터 글로벌 LNG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국제에너지기구(IEA) 역시 2030년을 LNG 수요 정점 시점으로 제시했다.

또 다른 위험 요인은 지정학적 리스크다. 일본, 한국, 중국 등 아시아 주요국들은 LNG 수입의 상당 부분을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고 있는데, 해당 해협은 중동 정세 불안이 발생할 경우, 수송이 차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에너지 싱크탱크 엠버는 “LNG는 에너지 전환에 반하는 위험한 베팅일 수 있다”고 경고하며,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의 확산이 LNG 시장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다고 지적했다.

[☞셀·토탈·BP·엑손, LNG에 승부수... IEA는 “2030년 수요 정점” 경고](#)  
[☞철강 관세에 주춤한 美 LNG 프로젝트...토탈, 추가 투자 보류](#)

## □ 미래 에너지 핵심인가, 위험한 베팅인가...엇갈리는 LNG 시장 전망

항공업계가 탄소 감축의 핵심 해법으로 내세운 지속가능 항공유(SAF) 산업이 심각한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지난 6월 뉴델리에서 열린 연례 정상회의에서 350여 개 회원사를 대표해 탄소중립 목표를 유지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SAF공급난, 차세대 항공기 도입 지연, 비용 폭등, 법적 리스크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히며 항공업계는 탈탄소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SAF 공급 부족 문제가 두드러 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상징적 성공 사례로 꼽히던 월드에너지(World Energy)의 캘리포니아 파라마운트 정유소가 지난 4월 가동을 중단했다. 유나이티드항공, 젯블루항공에 SAF를 공급하며 업계의 희망으로 불렸던 이 시설은 확장 과정에서 예산 초과와 지연을 겪었고, 결국 직원 35명이 전원 해고됐다.

후속으로 추진되던 휴스턴 제2 공장 역시 항공사들의 미온적 참여와 투자 철회로 무산된 상태다.

영국 브리티시항공이 “게임 체인저”라고 치켜세웠던 벨로시스(Velocys)의 SAF 공장은 아직까지 완공되지 못했고, 현재 영국 내 SAF 공급은 필립스66 한 곳에 국한돼 연간 2만 톤(항공유 소비량의 0.2%)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영국 항공사들은 핀란드·네덜란드·미국 등 해외에서 고가의 SAF를 수입해야하는 상황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재까지 발표된 주요 SAF 프로젝트 165개중 상업 생산에 성공한 것은 36건뿐이고, 이 가운데 대량 생산을 보고한 사례는 10건에 불과하다. 원료가 제한적인 HEFA 공정에 의존하는 현 구조로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HEFA 공정이 주로 폐식용유, 동물성 지방, 농업 폐기물 등 한정된 자원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2050년까지 연간 1,180억 갤런의 SAF가 필요하다고 추산했지만, 현재 전 세계에서 사용 가능한 폐식용유와 동물성 지방의 총량은 해당 목표에 크게 미달하는 상황이다.

[☞ SAF 확대 제동...기술·원료 한계에 세계 상업 생산 6% 불과](#)

### 「 Editor's Comment 」

글로벌 에너지 산업은 성장 기회와 구조적 리스크가 공존하는 국면에 들어섰다. 최근 에너지 산업의 성공여부는 기술력이나 수요 확대 자체보다는 제도적 안정성, 원가 경쟁력, 그리고 국제 무역 환경에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결국 에너지 전환의 속도보다는 '불확실성을 얼마나 견디며 장기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월간 ESG 트렌드 리포트 8호

Monthly ESG Trend Report

## 02 반도체/IT/철강/조선

### 『 Key Takeways』

- 미국 정부가 8월 29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법인의 VEU(검증된 최종사용자) 지위를 철회했다. 반도체 산업의 자국 전략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 데이터센터 급증으로 전력·수자원 인프라 압박이 커지면서 규제와 표준화 필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
- 중국 수출 확대 상수화와 EU CBAM 본 시행('26.1.1) 준비가 맞물리며, 유럽 내 가격·투자·수입규제의 줄다리기가 심화되고 있다.
- 해운업의 메탄올·암모니아 연료와 선박 탑재형 탄소포집·저장(OCCS) 기술이 본격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다.

## □ 美, 동맹사 중국 팽까지 규제망 확대... 'VEU 회수'로 공급망 압박 본격화

미국 상무부가 29일(현지시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법인에 적용해오던 '검증된 최종사용자(VEU)' 지위를 공식 철회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120일 후부터는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중국 공장에 들여오려면 반드시 개별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별도 승인 없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유지·보수용 장비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증설이나 공정 업그레이드 목적의 반입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대만 TSMC도 예외는 아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TSMC 난징 공장의 VEU 권한을 2025년 12월 31일부로 철회한다고 통보했다. TSMC는 "공장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으나, 대만 경제부는 해당 공장이 전체 생산량의 약 3%에 불과해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발표 직후 SK하이닉스 주가는 약 5%, 삼성전자는 2%대 하락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 내 생산 비중이 높은 SK하이닉스가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단기 충격은 제한적이지만 장기적으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반도체 산업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격상하려는 움직임이 분명해지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인텔 지분 10% 확보 방안을 검토 중이며, 무소속 진보 성향 버니 샌더스 미 상원의원도 공개 지지에 나선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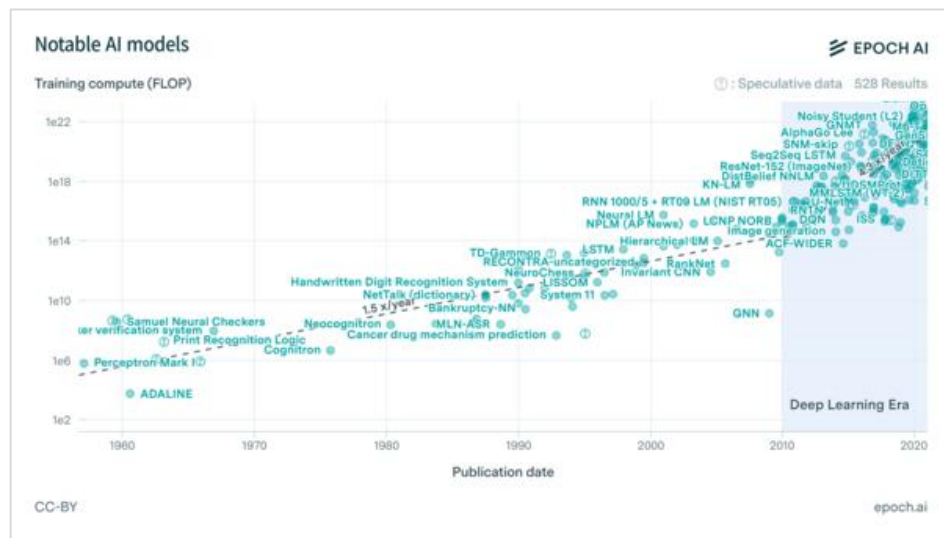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반도체 공급망을 두고 동맹국들의 관계도 강화되고 있다. EU와 미국은 8월 21일(현지시각), 7500억달러(약 1050조원) 규모의 에너지 계약과 6000억달러(약 840조원) 투자 합의를 체결하면서, 여기에 반도체 협력도 포함시켰다.

국내에서도 대응이 빨라지고 있다. 정부는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결합한 '한국판 IRA' 도입을 서두르며 전략산업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국내 기업의 투자 매력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 ☞ [美 정부, 인텔 10% 지분 확보 추진...샌더스·트럼프 한목소리](#)
- ☞ [EU-美, 7500억달러 에너지 수입·6000억달러 투자 합의...LNG·반도체 협력 포함](#)
- ☞ [정부 '한국판 IRA' 도입 속도 낸다](#)
- ☞ [산자부 - 미\(美\) 상무부, 삼성·SKH VEU 지위 철회 발표](#)

## □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폭증...정책 신뢰와 기술 표준이 뒷받침돼야

올해 들어 GPT-4급 초거대 AI 모델이 30종 이상 새로 출시되면서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AI 정책 분석 기관 Epoch AI 집계에 따르면 2024년에도 매달 평균 두 개 꼴로 같은 수준의 모델이 발표됐으며, 이러한 확산세는 전력망과 냉각, 수자원 인프라 전반에 구조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주요 AI 모델의 학습 연산량 추이(1950~2020년대) / Epoch AI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7월 'AI 액션 플랜'을 발표, 전력망 우선 연결과 인허가 간소화 등 규제 완화 조치를 내놓은 바 있다.

문제는 예상 전력 수요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 실제 착공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시설까지 송전망 접속을 중복 신청하면서, 이른 바 '팬텀 데이터센터'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실제보다 훨씬 많은 수요가 대기

중인 것처럼 착시를 일으키면 전력망 증설이 과잉으로 이뤄지고 자원 배분의 비효율이 초래될 수 있다.

수요반응(DR) 프로그램도 해법으로 거론되지만, 데이터의 정확성과 공개가 전제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이다. 팬텀 데이터센터까지 DR 대상으로 잡히면 인센티브 설계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WSJ은 전력망 차원의 실효성 있는 수요 관리를 위해서는 사업자들의 수요 예측 자료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제출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기술적 대응으로는 주목받고 있는 액침냉각 또한 제도적 미비함이 문제가 되고 있다. B2B 데이터센터 전문 매체 데이터센터다이나믹스는 사용 유체의 안전성, 장비 교체 시 폐기 처리, 화재·누출 위험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다며 제도적 안전장치 없이는 대규모 확산이 어렵다고 분석했다.

수자원 문제도 갈등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세계 최대 데이터센터 집적지인 [버지니아주 로우던 카운티](#)는 2023년 한 해에만 약 20억갤런(7570만 리터)의 냉각용수를 사용해 2019년 대비 63% 늘었다. 지하수 고갈과 주민 식수원 위협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역사회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백악관 - 미국 AI 액션플랜](#)

[Epoch AI - Over 30 AI models have been trained at the scale of GPT-4](#)

[데이터센터다이나믹스 - Immersion cooling safety in a data center](#)

## □ 中 수출 고착화 vs EU CBAM 정착... '정책-시장 충돌' 본격화

중국 철강업계가 수출 1억 톤 이상 기조를 굳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 시행 준비를 서두르면서 글로벌 철강시장이 정책과 시장 간 충돌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중국 국유 철강기업 바오산철강(바오스틸)은 올해 중국의 철강 수출량이 연간 1억 톤을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로이터는 8월 29일 보도를 통해 바오스틸이 1~7월에만 483만

톤을 수출해 이미 전년 연간 수출량 607만 톤에 근접했다고 전했다. 회사는 2026년까지 연간 1500만 톤, 2028년까지 2000만 톤의 수출 역량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다만 이 같은 공격적 확장 기조는 덤핑 논란과 맞물려 무역 마찰을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 로이터는 같은 보도에서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이 세제와 관세 장벽을 강화할 경우 중국발 과잉공급이 글로벌 가격 질서를 다시 흔들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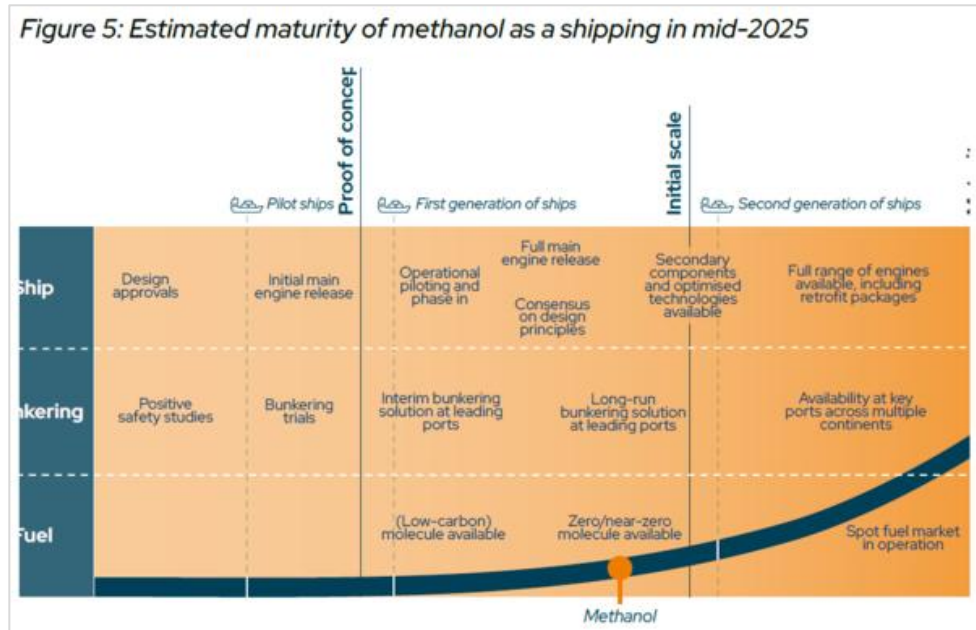
[EU 집행위는](#) 8월 28일 CBAM 배출값 산정, EU ETS 무상할당 조정, 3국 탄소가격 공제 방식을 구체화하기 위한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동시에 철강·알루미늄·비료·시멘트·수소 등 대상 품목에 대해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는 수입 강제의 공급망 탄소투명성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조치로, 중국·터키 등 주요 수출국 기업들에는 직접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EU, CBAM 편법 차단 대책 마련...국가 단위 배출계수 검토](#)

## □ 메탄올·암모니아 연료, '현실화'됐지만 공급망 병목 심각

조선업계의 탈탄소 연료 전환이 개념 단계를 넘어 상용화로 이동하고 있다. 글로벌 해운 탈탄소 연합(Getting to Zero Coalition)은 8월 보고서에서 메탄올은 이미 저탄소 운항이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고, 암모니아는 실증 단계를 거쳐 초기 상용화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메탄올은 60척 이상 운항, 300척 발주, 20여 개 항만 벙커링이 가능할 정도로 초기 규모를 갖췄다. 기존 선박 개조도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하지만 실제 사용 연료 대부분은 화석연료 기반 '그레이 메탄올'로, 바이오·e-메탄올은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 인증 문제와 오프테이크 계약 리스크까지 겹치며, 중국산 저가 연료 의존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새로운 변수다.



메탄올은 이미 '개념 증명(Proof of concept)' 단계를 넘어 초기 상용화 단계(Initial scale)에 진입했다. / Getting to Zero Coalition

암모니아는 엔진 시험과 bunkering 시범을 통해 탱크 투 웨이크 기준 90~95% 감축 잠재력이 확인됐다. 그러나 독성 물질 특성상 안전 설계와 승무원 훈련이 까다롭고, 아산화질소(N<sub>2</sub>O)와 암모니아 슬립 같은 배출물은 상용화를 가로막을 수 있는 결정적 리스크로 지목된다. IMO의 명확한 라이프사이클 가이드라인과 실선 데이터 검증이 시급하다.

공급망과 인프라 제약도 뚜렷하다. 메탄올은 기존 화학 바지선을 활용할 수 있지만, 암모니아는 냉각·전용 bunker선 필요하다. 그러나 2026~27년 상업 운항 개시 시점까지 bunker선 공급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펜하겐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CIP)가 유럽에서 부유식 저장·앵커리지 bunker링 솔루션을 제시한 것도 이런 현실을 반영한다.

보고서는 그린 연료 가격 격차를 메워줄 정책 인센티브, 국제적 인증 체계, 북 앤 클레임(book-and-claim) 시스템, 연료 수요 집적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급망·인프라·규제라는 삼중 병목을 풀어야만 2030년 이후 본격적 확산이 가능하다는 진단이다.

[▶ 글로벌 해운 탈탄소 연합\(Getting to Zero Coalition\) 보고서](#)

『 Editor's Comment』

규제가 산업의 판을 새로 짜고 있지만, 기술은 앞서고 제도·인프라·시장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는 전략 자산으로 묶였고, 데이터센터는 전력 수요를 관리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 철강은 보호무역의 최전선에 서 있으며, 해운은 규제는 앞서지만 연료와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못하는 형국이다.

이미 규제 기조가 확정된 만큼, 기업들은 기술·시장·제도 사이의 간극을 효율적으로 메우기 위한 실행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월간 ESG 트렌드 리포트 8월호

Monthly ESG Trend Report

## 03 자동차

### 『 Key Takeways 』

- 베트남의 빈패스트는 인도·인도네시아를 거점으로 아시아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며, 글로벌 후발주자로서 생존 전략을 시험받고 있다. 미국·유럽에서의 난항을 교훈 삼아 신흥시장에서 먼저 입지를 확보하려는 전략은 기회이자 리스크로, 가격 경쟁과 인프라 구축 속도가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 캘리포니아의 독자적 EV·배출 규제가 연방정부와 충돌하면서, 미국 내 자동차 정책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했다. 법무부 개입과 주정부 소송이 맞물리며 연방-주정부 갈등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완성차 업계의 투자 결정과 전환 전략에 직접적 변수가 되고 있다.

- 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 사례는 과거의 인권·환경 문제도 현재의 법적 리스크로 되돌아와 ESG 평가와 수익성에 치명타를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글로벌 규제 환경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기업들은 수십 년 전의 행적까지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ESG는 단순한 평판 관리가 아닌 재무적 생존의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 □ 기술경쟁 격화되는 EV 전환 시장, 수소와 e-연료는 전략 다변화



빈패스트 기업건물 전경 / 이미지 출처 빈패스트 홈페이지

베트남 전기차 업체 빈패스트가 본격적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 인도·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생산 거점을 확보하며 성장 시장에 집중하는 한편, 미국에서는 판매 전략을 수정하며 돌파구를 모색하는 모습이다.

빈패스트는 8월 4일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에 첫 해외 조립공장을 완공하고 가동에 들어갔다. 약 162만제곱미터 규모 부지에 차체·도장·조립·품질검사까지 아우르는 생산라인을 갖췄으며, 초기 연간 5만대에서 최대 15만대까지 생산 능력을 확대할 수 있다. 현지에서는 약 3500명의 직접 고용이 창출될 전망이다. 빈패스트는 VF 6, VF 7 SUV 생산을 시작으로 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수출 거점으로 키운다는 전략이다. 인도네시아에도 연간 5만대 규모 조립공장을 착공했으며, 태국·필리핀 진출도 준비 중이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초기 진입에 난항을 겪었다. 노스캐롤라이나 공장 착공은 2028년으로 연기됐고, 초기 모델의 품질 논란과 리콜도 있었다. 이에 빈패스트는 직영 판매 대신 프랜차이즈 모델로 전환해 현지 유통망을 활용하는 방식을 택했다. 최근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 첫 대리점을 열어 북미 최대 전기차 시장 공략에 다시 나섰다. 이곳에서는 VF 8, VF 9 SUV를 공격적인 가격과 업계 최고 수준의 보증 조건으로 판매한다.

빈패스트는 지금까지 창업주 팜 넷 브영 회장이 최소 140억달러(약 19조4500억원)를 투입하며 그룹 차원에서 총력 지원을 이어왔다. 그러나 2024년 글로벌 판매량 9만7000여대 가운데 90%가 베트남 내수에 집중되는 등 성과는 제한적이었다. 전문가들은 중국 업체와의 가격 경쟁이 본격화되기 전에 아시아 신흥시장에서 확실한 입지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 ☞ 베트남 빈패스트, 미국 EV 최대 격전지 캘리포니아 진입
- ☞ 140억달러 쏟은 빈패스트, 美·유럽 접고 아시아로 방향 전환
- ☞ 빈패스트, 인도 공장 본격 가동... 연 15만대 생산·남아시아 수출 거점으로

## □ 캘리포니아, 연방법과 충돌 속 EV 정책 독자 노선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좌), 연방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우) / ChatGPT 이미지 생성

미국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주의 전기차(EV) 및 배출 규제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는 무효화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규정(ACC II, ACT 등)을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가 여전히 집행하고 있다며 조사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CARB가 제조사에 ACC II 기준 충족을 압박한 정황을 지적하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법무부도 소송전에 가세했다. CARB가 '클린 트럭 파트너십'을 통해 무효화된 대형 트럭 배출 규제를 사실상 되살리려 한다며 연방법 위반이라고 주장, 기존 제조사·상공회의소가 제기한 소송에 직접 개입한 것이다. 아담 구스타프슨 법무부 차석대법무관은 "파트너십이라는 이름으로 연방법을 우회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캘리포니아는 이에 맞서 독자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록 본타 주 법무장관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주 법무장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를 "과학적 근거를 무시한 위험한 시도"라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CARB는 새로운 전기차 전환 전략 보고서를 발표하고, 차세대 배출 규제안(ACC III) 마련에 착수했다. 리안 랜돌프 CARB 위원장은 "연방정부에 기대지 않고 독자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 ☞ 연방법 vs 주정부 충돌...美 법무부, '클린 트럭 파트너십' 소송 개입
- ☞ 캘리포니아, 트럼프 규제 철회 맞서 법적·정책 투트랙 가동
- ☞ 보조금 멈추고 규제 수사까지...캘리포니아 EV 정책, 사면초가

## □ 글로벌 완성차, ESG 규제 직격탄...폭스바겐·스텔란티스 잇단 타격



강제노동으로 배상금을 물게 된 폭스바겐(좌)과 배출가스 조작으로 논란된 스텔란티스(우)  
/ ChatGPT 이미지 생성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과거 인권 침해와 배출 조작 논란으로 잇따라 법적 책임을 지면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

브라질 노동법원은 1970~80년대 아마존 농장에서 강제노동을 운영한 혐의로 폭스바겐에 1억6500만헤알(약 423억원)의 배상금을 명령했다.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무장 경비원의 감시 속에 채무노예 형태로 일하며 열악한 주거·의료 환경에 방치됐다는 점이 인정됐다. 폭스바겐은 판결에 불복 입장을 밝혔지만, 이번 사건은 과거 인권 침해가 수십 년이 지나서도 법적·재무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실제 폭스바겐은 ESG 평가에서도 경쟁사 대비 뒤처지며, 최근 주가가 연초 대비 25% 급락했다.

스텔란티스는 유럽 완성차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배출가스 조작이 법원에서 공식 인정됐다. 네덜란드 법원은 푸조·오펜·시트로엥 등 주요 디젤차에 시험 조건에서만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이는 장치가 장착돼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는 독일 업체에 국한됐던 '디젤게이트' 책임이 프랑스·이탈리아계 브랜드로 확산된 첫 사례다. 스텔란티스는 판결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 수차례 벌금과 리콜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다.

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 사례는 ESG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역사적 인권 문제와 환경 규제 위반 모두에서 압박을 받으며 신뢰와 수익성에 타격을 입고 있음을 보여준다.

- ☞ 폭스바겐, 브라질 강제노동 배상 423억원...ESG 평가 추락·주가 25% 급락
- ☞ 스텔란티스 디젤차, 배출 조작 공식 인정...유럽 완성차 첫 법적 판단

### 「 Editor's Comment 」

전기차 산업은 이제 각 지역의 시장 여건과 정책 방향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아시아 신흥국은 새로운 성장 기회로 부상하는 반면, 미국은 연방과 주정부 간 정책 충돌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동시에 과거의 인권·환경 문제가 현재의 법적 리스크로 이어지면서, 기업들은 기술 경쟁력뿐 아니라 지역별 규제와 사회적 요구에 얼마나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가 향후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월간 ESG 트렌드 리포트 8월호

Monthly ESG Trend Report

## 04 기후테크/순환경제

### 『 Key Takeways 』

- 탄소 제거·저장 기술은 해상·소규모 현장까지 확산되며 상업화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크레딧 과다 발행 논란이 이어지면서 신뢰성 확보가 여전히 시장의 핵심 과제로 남아있다.
-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급증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원자력 규제 완화 정책이 맞물리며 원전이 미국의 전략 전원으로 재부상하고 있다. 상반기 미국 기후기술 벤처 자금의 약 25%가 원전 스타트업으로 유입됐다.
- 건축·건설 부문에서는 모듈식 건축, 저탄소 벽돌, 해상 포집 활용 등 순환경제형 자재가 전 과정에 도입되며, 글로벌 기업과 투자자들이 대규모 조달·M&A를 통해 전환을 뒷받침하고 있다.

## □ 탄소제거·저장 상업화 가속...시장 신뢰 구축이 과제

탄소 제거·저장 기술이 대형 프로젝트를 넘어 해상과 소규모 현장까지 확산되며 상업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캐나다 딥 스카이는 스카이레누 장비를 활용해 북미 최초로 직접공기포집(DAC) 기반 탄소를 앨버타 지하 염수층에 영구 저장했고, 마이크로소프트·RBC 등과 계약을 맺어 상업화를 본격화했다. 옥시덴탈은 미국 텍사스주 에터 카운티에 건설 중인 '스트라토스(Stratos)' 직접공기포집(DAC) 허브를 2025년 말까지 가동할 예정이다. 미국 카본 리지는 선박 배기가스에서 탄소를 분리·저장하는 원심식 해상 포집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 또 다른 미국 기업 아이온 클린 에너지는 트럭 운송이 가능한 모듈형 장치 'ICE Blocks'로 소규모 산업 현장까지 CCS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산업과 글로벌 연합체도 속속 출범하며 산업화 동력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미쓰비시상사·미쓰비시종합연구소 주도로 '일본 CDR 연합체'를 이달 공식 출범한다. 철강·시멘트·항공 등 감축이 어려운 산업에서 잔여 배출을 상쇄하기 위해 CDR 기술을 도입하고, 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전략과 연계해 투자와 지역 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미쓰이조선, 스미토모상사, 도쿄해상일동화재, 일본우선 등 대형 기업이 참여하며, 정부·연구기관·민간이 협업하는 민관 공동 플랫폼이 구축된다. 같은 시기 출범한 글로벌 '해양 탄소 제거 연합(mCDR)'은 카본 비즈니스 카운슬과 월드 오션 카운슬이 공동 주도하며, 기업·학계·비영리가 참여해 해양 비료화, 알칼리화, 해조류 농장 등 기술 연구와 상용화를 가속화한다. 주요 참여 기업은 푸로어스, 바뉴 카본, 이쿼틱, 씨오투, 베스타, 바이카브다.

산업화 동력이 확대되고 있지만, 탄소 제거로 발생한 크레딧의 신뢰성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스위스 클라임웍스의 세계 최초 DAC 시설 '오르카'는 건설과 장비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내재 배출량을 반영하지 않아 탄소 크레딧을 실제보다 많이 발행했다는 논란이 일었고, 탄소 크레딧 평가기관 칼릭스 글로벌에서는 신뢰성이 가장 낮은 '최하 등급'으로 분류됐다. 오르카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 후속 대형 프로젝트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 CDR 연합체 회원. (발기인 미쓰비시상사, 미쓰비시종합연구소, 추천회원 미쓰이조선, 스미토모상사,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 일본우선(닛폰유센))

이에 따라 품질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고 있다. 글로벌 탄소배출권 검증기관 베라는 S&P글로벌과 협력해 차세대 레지스트리를 공동 개발하고 있다. 새 시스템은 프로젝트 전 생애주기를 추적·관리하며 국제 시장과의 연동 기능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거래 이력의 신뢰성을 높이고 절차 중복을 줄여 시장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 리스크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글로벌 보험중개사 마시는 뉴욕 기반 체스넛 카본의 2억1000만달러(약 2924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탄소 크레딧 보험을 제공했다. 이 보험은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장기 계약에서 약속된 탄소 제거 크레딧이 제때 발행·공급되지 않을 경우의 손실을 보장하는 구조다.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보험이 결합된 첫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례로, 대형 수요자와 투자자의 신뢰를 끌어내는 데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 해양 탄소 제거 연합 출범...6기가톤 감축 목표 대응 본격화](#)

[☞ 미쓰비시 주도 CDR 연합 출범... 일본도 탄소제거 산업화 시동](#)

[☞ 세계 최초 DAC 시설 클라임웍스 '오르카', 내재 배출량 누락 논란...탄소크레딧 최하등급](#)

[☞ 베라, 차세대 탄소 시장 플랫폼에서 S&P 글로벌과 파트너십 체결](#)

## □ 원전 스타트업에 벤처 자금 25% 집중...美 원자력 전략 전원 부상

미국에서 원자력이 다시 전략 전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의 급증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서명한 원자력 규제 완화와 신규 허가 신속화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전력 수요 증가는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고 있다. 구글은 테네시밸리전력청(TVA)과 차세대 원자로 기업 카이로스 파워(Kairos Power)와 함께 미국 최초의 4세대(Gen IV) 원자로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했다. 구글은 2030년부터 테네시와 앨라배마 데이터센터에 원전 전력을 공급받으며, 최대 500MW 규모의 청정전력 확보를 목표로 한다. 이번 계약은 고온 플루오르화 소금 냉각 방식과 저농축 고농축우라늄(HALEU) 연료를 적용한 '헤르메스2' SMR 기반으로, 차세대 원전이 상업 계약 단계에 진입한 첫 사례다.



카이로스 파워의 차세대 원자로 시설 상상도./카이로스 파워 홈페이지

공급업체의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빌 게이츠가 창립한 원자력 기업

테라파워(TerraPower)는 유타주와 차세대 원전 및 에너지저장 설비 건설을 위한 부지 선정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테라파워가 개발 중인 '나트륨(Natrium)' 원자로는 345~500MW급 전력 생산이 가능하며, 용융염 기반 보조 에너지저장 시스템을 통해 출력 조절이 빠르고 물 사용량이 적다는 장점을 갖는다. 현재 와이오밍주의 퇴역 석탄화력발전소 부지에서 40억달러(약 5조6000억원) 규모 실증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지난 6월에는 6억5000만달러(약 9051억원) 투자를 확보해 추진 동력을 강화했다.

이 흐름은 시장에도 빠르게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블룸버그는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계약을 맺은 무탄소 에너지 기업들의 주가가 올해 들어 S&P500을 웃도는 상승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소형 원자로(SMR) 개발사 오클로(Oklo)는 연초 대비 275%, 블룸에너지(Bloom Energy)는 66% 상승했다. 또한, 블룸버그NEF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미국 기후기술 벤처 자금의 약 25%가 원전 스타트업으로 유입됐다.

[☞ 美 원전·지열, AI 붐 타고 자금 쏟아...기후 기술 투자금 25% 원전 스타트업에](#)

[☞ 테라파워, 유타주와 차세대 원전 MOU... AI-데이터센터 수요 대응](#)

[☞ 美 첫 'Gen IV 원자로 PPA' 체결...구글, 2030년부터 데이터센터에 공급](#)

## □ 건축·건설 부문, 순환경제와 저탄소 자재로 전환 가속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수요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건축·건설 부문에서는 순환경제와 저탄소 자재 활용이 조달부터 제조, 활용, 운영까지 전 과정으로 확산되고 있다. 먼저 조달에서는 순환형 건축 모델을 금융시장에서 대규모 자금을 확보해 확대한 대표적 사례로 핀란드 기업 아답테오(Adapteo)가 있다. 이 회사는 건축물을 철거·폐기하지 않고 분해·조립해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방식 덕분에, 기존 건축 대비 탄소발자국을 최대 96%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녹색 사모채권과 은행 대출을 통해 20억유로(약 3조원)를 조달했다.

제조 공정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사례로는 [영국의 어스포어스\(earth4Earth\)](#)가 있다. 이 회사는 상온에서 제조 가능한 바인더로 벽돌을 생산하며, 사용 중에도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탄산염 형태로 고정한다. 고온 소성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제조 단계에서의 배출을 사실상 제로로 만들고, 사용 후에는 100%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현재 영국 건축 기준(British Standards) 인증을 획득해 영국 셰필드 지역에 시범 적용 중이며, 2026년에는 영국 내 생산 거점을 가동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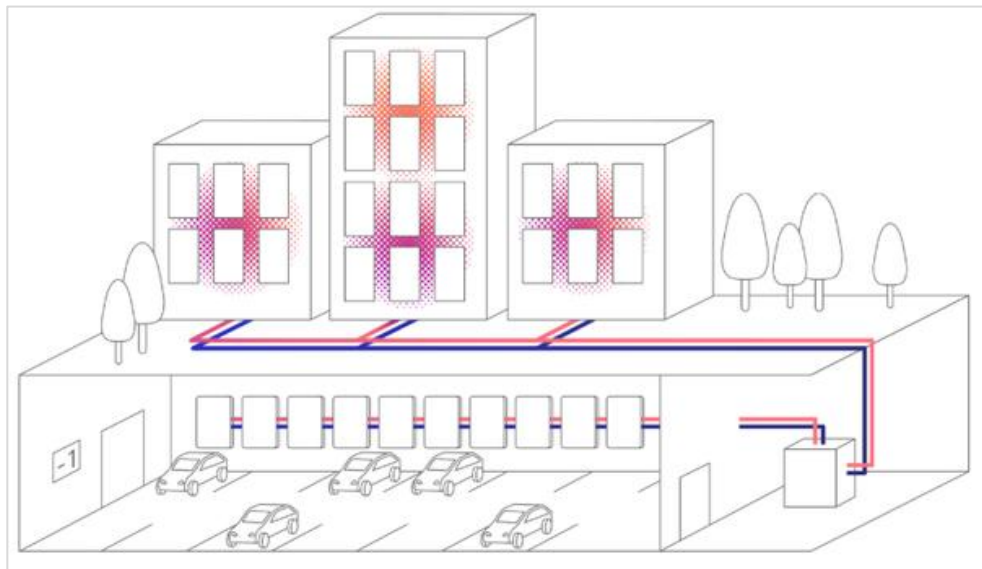
아답테오는 순환형 건축모형을 통해 탄소발자국을 감축한다는 전략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아답테오

포집에서 이송, 활용까지 잇는 탄소 관리의 첫 전 주기 실증 사례도 나왔다. 싱가포르의 글로벌 해상 탈탄소화 센터(GCMD)는 컨테이너선에 탑재한 해상 탄소포집장치(OCCS)를 활용해 25.44톤의 탄소를 포집했다. 이후 해상에서 수송선으로 옮겨 항만에 하역하고, 중국 내몽골 바오터우 공장으로 운반해 저탄소 탄산칼슘 생산에 활용했다. 이를 위해 탄소의 규제 분류를 '유해 폐기물'에서 '유해 화물'로 전환하는 조치가 병행됐으며, 글로벌 인증기관 DNV의 제3자 검증도 예고됐다. 해운 배출을 건자재 원료 체계로 연결한 순환경제 경로가 처음 실증된 셈이다.

미국 스타트업 브림스톤과 유통 공룡 아마존의 협력은 저탄소 시멘트가 대형 수요처의 성능 검증을 거쳐 상업 계약으로 이어진 사례다. 아마존은 브림스톤과 연간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자사 시험에서 시멘트 품질에 관한 국제 규격인 ASTM C150 기준을 충족해

기존 자재와 동등한 성능을 입증했다. 상용화가 진전되면 다년 공급 계약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브림스톤은 석회석 대신 규산칼슘 암석을 원료로 사용해, 시멘트 제조 과정의 핵심 배출원을 구조적으로 줄이는 것이 특징이다.

공급망 측면에서는 원료와 유통을 결합한 인수합병(M&A) 사례가 주목된다. 글로벌 건자재 대기업 CRH는 북미의 에코 머티리얼(Eco Material)을 21억달러(약 3조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에코 머티리얼은 플라이애시와 포졸란 등 보조시멘트재(SCM)를 공급하며, 매년 1000만 톤 이상의 석탄 부산물을 재활용해왔다. 이를 통해 폐기물 매립을 줄이고 동시에 시멘트 제조 과정의 배출을 감축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이번 인수는 저탄소 원료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대형 자재사가 공급망 안정성과 순환경제 전략을 동시에 강화한 사례로 평가된다.



스위스 스타트업 에너드레이프(Enerdrape)는 주차장과 터널 벽면에 설치하는 지열 패널로 건물의 난방·냉방을 공급하는 기술을 선보였다./에너드레이프 홈페이지

운영 단계에서는 지열에너지의 전환 기술이 주목된다. 스위스 에너드레이프(Enerdrape)는 지하 주차장이나 터널 벽에 부착하는 지열 패널을 통해 냉난방과 온수를 공급하며, 중·저층 건물의 열 수요를 충족하고 있다. 파리 아비타 단지에 설치된 145개 패널은 연간 70MWh의 열을 생산해 온수 사용량의 25%를 충족하고, 연간 약 15톤의 탄소 배출량을 줄였다. 초기 설치비가 10만달러(약 1억원)에서 50만달러(약 7억원)로

부담이 크지만, 에너지 단가는 kWh당 3~4센트(약 40원) 수준으로 미국 평균 가스 요금인 17센트(약 240원)보다 훨씬 낮아 경제성이 입증되고 있다.

[☞ EU 순환경제 확산 속 아답테오 20억유로 투자 유치...탄소발자국 96% 줄인다](#)

[☞ 선박서 포집한 CO<sub>2</sub>, 건축자재로 '재탄생'... GCMD, 세계 첫 해상 탄소순환 실증 성공](#)

[☞ 아마존, 건물 포트폴리오에 브림스톤 저탄소 시멘트 도입...직접 계약 체결](#)

[☞ CRH, 지속 가능한 건축 자재 생산업체 에코 머티리얼 21억달러에 인수](#)

[☞ 난방 탈탄소화 695조원 시장... 스위스 스타트업, 지하 주차장 벽으로 건물 난방 해결](#)

### 「 Editor's Comment 」

위 산업들은 공통적으로 기술 상용화는 빨라지지만, 시장 신뢰·정책 신호·금융 구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확산이 제한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탄소 제거는 다양한 기술이 상업화되고 있지만, 탄소크레딧의 품질 논란으로 시장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원전은 데이터센터 수요와 우호적인 정책으로 주요 전원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여전히 큰 비용과 설치 기간, 주민 수용성의 문제가 산재해 있다. 건설 부문도 순환경제 모델이 전과정에서 적용되고 있으나, 초기 비용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각 산업의 과제로 남아 있는 부분을 해결하는 기업이 시장 선점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월간 ESG 트렌드 리포트 8월호

Monthly ESG Trend Report

## 05 식음료

### 『 Key Takeways』

- 코카콜라와 펩시코 등 글로벌 소비재 기업들의 재활용 목표가 잇달아 후퇴하고 있다. 이는 고품질 재활용 원료 부족이라는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다.
- 중국 플라스틱 재활용 기업 리몰(Re-mall)이 음식 배달업체와 손잡고 오염도가 높은 포장재를 고품질 원료로 되돌리는 모델을 확산시키고 있다. .
- 2025년 8월 FAO 식품 가격 지수가 2년 만에 최고치인 130.1포인트를 기록했다. 육류·설탕·식물성 기름 가격 급등이 기업 원가와 각국의 식량 안보를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 FAO는 식품 가격이 식량·에너지·기후 정책과 긴밀히 맞물려 있다고 분석했다.

## □ 플라스틱 위기, 목표는 세웠지만 실행은 멈췄다

플라스틱 오염 해결을 위한 국제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글로벌 소비재 기업들의 자발적 목표는 뒷걸음치고 있다. 블룸버그는 8월 8일(현지시각) 코카콜라는 당초 2030년까지 전체 포장재의 50%를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대체하겠다고 했으나, 목표를 2035년까지 최소 35%로 낮췄다. 펩시코 역시 2030년까지 50%에서 2035년까지 최소 40%로 수정해, 두 회사 모두 시한을 5년 늦추고 비율도 줄였다.

블룸버그NEF(BNEF)는 식음료·생활용품·화장품 업계 전반에서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제시된 재활용 목표는 상당수가 달성되지 못할 것으로 분석했다.

목표가 후퇴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업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고품질 재활용 플라스틱의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폐플라스틱은 많지만, 수거·분류와 세척 체계가 미비해 원료로 다시 투입할 수 있는 물량은 제한돼 있다

이 같은 현실 속에서 국제사회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협정 체결을 시도하고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5일부터 1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2)를 열고 179개국 대표단과 1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합의를 모색했다. UNEP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2060년까지 플라스틱 생산량은 3배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상의 최대 변수는 미국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조약 지지 의사를 밝혔지만, 트럼프 진영과 공화당 의원들은 생산량 상한제에 강하게 반대하며 폐기물 처리·재활용 중심의 제한적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생산량 제한을 포함한 협정을 지지해 미국 내 정치적 분열이 국제 협상의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다.

[유럽연합\(EU\)](#)은 협상 개막 시점에 맞춰 ‘순환경제법(Circular Economy Act)’ 제정을 공식화하며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집행위원회는 공개 협의를 시작으로 2026년 4분기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자원순환율을 두 배로 높ی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EU의 자원순환율은 2010년 10.7%에서 2023년 11.8%로 사실상 정체 상태다.

법안은 전자폐기물 수거·재활용, 2차 핵심 원자재 활용 확대, 폐기물·원자재 단일시장 조성 등을 축으로 한다. 생산자책임제 단순화와 디지털화, 공공조달 의무화까지 포함해 EU를 '세계 순환경제 선도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 글로벌 플라스틱 조약 지연 속, 코카콜라·펩시코 재활용 목표 후퇴](#)

[☞ 유엔 플라스틱 협상 최종 라운드... EU, 순환경제법 카드로 규범 선점](#)

[☞ Companies' Circular Plastic Ambitions Slow as Costs Bite](#)

## □ 음식 배달 폐기물, '순환경제' 기회로...

### Re-mall이 중국 재활용 시장을 장악하는 방식은?

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둔 리몰(Re-mall)은 2015년 설립된 플라스틱 재활용 기업이다. 음식 포장재처럼 오염도가 높아 재활용이 어려운 폐플라스틱을 고품질 재생 폴리프로필렌(rPP)으로 전환하는 독자 기술을 갖추고 있다. 장시성 생산기지는 상하이와 광저우 등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입지적 강점을 지닌다. 리몰이 생산하는 투명 재생 플라스틱은 식기류, 장난감, 화장품 용기, 직물 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리몰의 강점은 음식 배달업체와의 협력 네트워크다. 메이뚨(Meituan), 어러머(Ele.me) 등은 매일 수천만 건의 주문을 처리하는 중국 최대 배달 플랫폼으로, 일회용 포장재 폐기물의 주요 발생원이다. 리몰은 이들과 손잡고 포장재 회수부터 재활용·재투입까지 이어지는 '클로즈드 루프(Closed-loop)' 모델을 구축했다. 단순 원재료 공급을 넘어 고객사의 ESG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구조로, 기존 재활용 기업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잉카 순환경제 투자 책임자 루카스 피서(Lukas Visser)/ 잉카 그룹 홈페이지

이 같은 구조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잉카 그룹(Ingka Group)은 올해 리몰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다. 투자 부문인 잉카 인베스트먼트(Ingka Investments)를 통해 재생에너지, 순환경제, 지속가능 인프라 분야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집행하고 있다. 잉카 그룹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절반으로 줄이고 '완전한 순환경제 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투자 금액은 비공개지만, 이는 잉카가 유럽 기업들에 이어 아시아에서 처음 단행한 순환경제 투자다.

잉카 순환경제 투자 책임자 루카스 피서(Lukas Visser)는 "리몰이 음식 배달업체와 구축한 강력한 공급망을 통해 중국 재활용 시장에서 이미 상당한 영향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잉카는 이번 투자를 성장 자본으로 정의하며, 리몰의 상업적 생산능력 확대와 시장 확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Ingka Group makes first circular investment in China with stake in plastic recycler Re-m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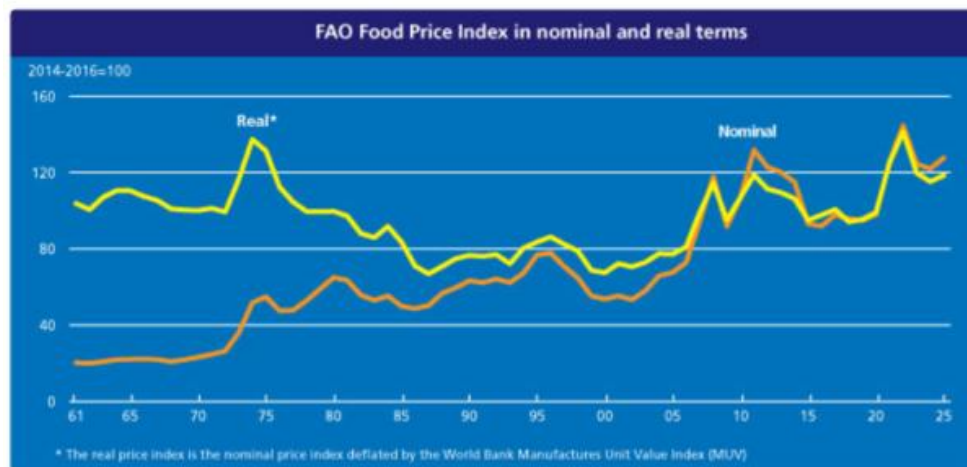
[☞ IKEA's biggest retailer funds Chinese food packaging recycler](#)

[☞ \[ESG Deal\]이케아 모기업 잉카그룹, 중국 리몰에 11억6000만달러 투자...순환경제 인프라 첫 진출](#)

□ 세계 식품 가격, 동월 대비 2년 만에 최고치

FAO 지수 130.1포인트...육류·식물성 기름 급등이 주도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2025년 8월 식품 가격 지수가 130.1포인트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전년 동월 대비 6.9% 오른 수치로, 2023년 이후 2년 만에 최고치다. FAO 식품 가격 지수는 곡물, 육류, 유제품, 식물성 기름, 설탕 등 5개 품목군의 국제 거래 가격을 종합해 산출하는 지표로, 세계 식량 안보 상황을 가늠하는 핵심 기준으로 활용된다.



FAO 식품 가격 지수 장기 추이 (1961~2025년). 명목 기준(Nominal)과 실질 기준(Real) 모두 2000년대 이후 상승세를 보이며, 2025년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FAO

가격 상승을 이끈 품목은 육류, 설탕, 식물성 기름이다. 특히 식물성 기름은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팜유 기반 바이오디젤 혼합 의무를 확대하면서 수요가 급증한 영향이다. 반대로 곡물과 유제품은 풍작과 수요 둔화로 일부 하락세를 보였다. FAO는 "밀 가격은 유럽연합과 러시아의 풍작, 쌀 가격은 인도의 수출 경쟁으로 내려갔다"고 설명했다.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는 팜유와 설탕 가격의 추가 상승 가능성이 주목된다. 특히 바이오연료 확대 정책이 유지된다면, 식품과 에너지 시장이 서로 얽히며 가격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반면 곡물 가격은 단기적으로 안정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식품 가격 상승은 단순한 농산물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식품 기업들의 원가 부담, 신흥국의 식량 안보, 각국의 물가 정책까지 파급력이 확산된다. 글로벌 식음료 기업들은 원재료 가격 전가 여부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고, 정부는 인플레이션 관리 차원에서 식량 보조금이나 수입 정책을 재조정할 수밖에 없다.

FAO는 이번 보고서에서 곡물 가격은 풍작과 수요 둔화, 옥수수는 사료와 에너지 수요, 팜유는 바이오연료 정책에 의해 좌우되는 등 식품 가격이 식량·에너지·기후 정책과 긴밀히 얽혀 있다고 분석했다.

[!\[\]\(001db52133ab4d4e6f33ee52d8a36710\_img.jpg\) FAO Food Price Index |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 『 Editor's Comment 』

글로벌 식음료 산업은 재활용 목표 후퇴와 원자재 가격 급등이라는 이중 압박 속에서, 실행 없는 ESG 공약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플라스틱 순환 인프라와 공급망 혁신, 식량·에너지 정책의 정합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지속가능성은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